

교육 개혁을 위한 대안 발표회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비 지출 줄어

교육 소비자, 사교육비 유발 방관 정책 막아야

값싼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교육민회가 주최한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 발표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공은배(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 연구부장)씨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논리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미화 되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은 매우 열악한 기형적인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에 투자되는 교육부 예산은 10조 8천억원으로 이는 방위비 10조 4천억원을 능가하는 규모이며, 여기에 지방정부 및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합하면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노후화 된 실험 실습 여건 등의 문제가 여전하고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 교육비중 공. 사 교육비의 비율은 30:70으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들어 과열 과외등으로 사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소비자들이 앞장서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막대한 교육비 투자 불구 교육 수준 매우 낮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요구돼

교육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규모의 영세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표가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교육비를 GNP와 비교한 비중인데 대부분 선진국이 5%를 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94%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교육재정 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규모의 영세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의 빈약

을 초래, 선진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질 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투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학의 경우 재정 구조가 취약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국.공립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값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교육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재정 확충을 중앙정부 일변도에서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지방 교육 자치가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 단위학교 스스로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돈 걷는 방법과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막대한 사교육비중 40%나 차지하는 과열과외 경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양승실씨(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장)는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지 소수 몇명의 엘리트 교육만으로는 평균적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교육의 질을 높혀 교육 수혜자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아 사교육비가 그 효과성과 무관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 정부가 교육열을 불모로 지속해온 '사교육비 유발 방관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